ISSUE PAPER TALK

MENTAL HARM

# ‘심리재해’ 복지가 아닌 안전의 문제다

“국가 전산망 장애 대응 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의 사망.”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던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공무원의 부고가 낯설지 않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죽음은 더 많을 것이다.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12일에도 경북도청 소속 공무원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직장에서 겪은 어려움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한다.

누군가의 부재를 전하는 소식은 언제나 마음을 덜컥이게 하지만, 공직자의 죽음은 유독 더 무겁게 다가온다. 그가 눈을 감기 전까지 맡았던 ‘공무’가 나의 삶과 완전히 떼어놓고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에게 ‘공직’이라는 책임의 무게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붙는다. 그래서 공무원의 부고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기자

## 공무원 정신질환 재해, 민간의 11배

잇따른 죽음 앞에서 공직사회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초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공직 심리재해 진단 및 개선 표준가이드>를 발간하면서 이 현상을 '심리재해'라고 규정했다. 심리재해는 "직무스트레스 등에서 비롯된 부정적 반응이 정신 또는 신체건강에 문제를 일으켜 질환이나 자살 등 재해로 이어지는 일련의 현상"을 말한다. '마음의 병'이 아니라 '산업재해'다.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2019년 178명에서 2024년 38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자살 순직자는 4건에서 18건으로, 4.5배 증가했다. 2023년 기준으로 공무원 1만 명당 정신질환 재해 승인 건수는 민간 노동자의 11배에 달한다. 공직사회의 경고등이 켜진 지는 이미 오래다.

공직사회를 덮친 '심리재해'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악성 민원, 감정노동, 끝없는 책임 전가, 평가 압박이 공직자의 일상에 얽혀 있다. 공무직도 다르지 않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자의 89%가 최근 1년간 악성 민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해 "그냥 참는다"고 말한 비율이 43.8%였다. 참는 것이 곧 생존의 방식이 된 셈이다.

심리재해는 개인의 '심리적 약함' 때문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조직문화·업무체계·사회적 압박이 함께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다. 지금껏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마음건강 자가진단이나 심리상담 등 복지 중심의 프로그램에 머물러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마음의 균열을 막을 수 없다.

## 마음의 SOS를 진단하는 방법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원래 추락·폭발 같은 물리적 재해를 막기 위한 제도였다. 하지만 최근 선진국은 이 평가를 심리적 위험요인까지 확장해 조직 차원의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영국·덴마크·핀란드는 이미 직무스트레스를 사업장 위험성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 영국 보건안전청(HSE)은 '스트레스 관리 표준(Management Standards)'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 계획을 세운다. 핀란드는 '직무요구-자원 모델(Job Demand-Resource Model)'을 활용해 과중한 업무와 통제 부족 간의 불균형을 측정하고, 이를 조직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게 한다.

> 공직사회의 잇따른 심리재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문화와 업무체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산업재해다.

이러한 접근은 심리적 위험을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아닌 '조직의 구조적 리스크'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마음이 아픈 것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제도의 틀과 업무 설계에 존재하는 위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다.

## 행정이 안전해지는 길

한국 공직사회도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인사혁신처의 '표준가이드'는 공무원의 마음 건강을 복지가 아닌 안전의 문제로 다루려는 시도다. 심리재해는 예방 가능한 위험이며, 위험성평가는 그 출발점이다. 공직사회의 마음 건강은 단순히 회복탄력성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행정의 신뢰를 지키는 일,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토대이기도 하다.